개헌…대선 전이냐 후냐 대권주자들 신경전

안철수, 2018년 국민투표
손학규, 호헌은 '도로 박근혜'
김부겸, 논의 늦출 필요 없어
국민의당 오늘 당론 여부 결정

야권 대선주자들이 개헌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광주를 찾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대선 이후 개헌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추진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주목된다.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면서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지금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제도화할 적기"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검찰 수준으로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조선대 해오름홀에서 열린 '국민주권 개혁회의(가칭) 광주·전남 보고대회'에 참석해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그 전에 헌법을 개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대선 이전 개헌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호헌세력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미 여러 개헌안도 나왔다.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 체제 속에 대선을 치르자는 호헌세력은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패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만약 개헌 논의과정 중에 일찍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때까지 논의된 개헌안을 대통령 후보가 수용해 당선 후 즉시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하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정신에 따라 다당제 협치를 하고 2020년 총선에서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물러나면 된다"고 향후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위대한 국민의 시민혁명"이라고 규정한 손 전 대표는 "시민혁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경제민주화 구축, 기득권 타파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독일식 합의제 민주주의 도입, 재벌 중심 경제체제 개혁, 차별 철폐, 물샐 틈 없는 복지 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촛불민심은 우리에게 정권교체하고, 정치도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는 메시지"라며 "정치교체로 불공정·불평등·반칙 등 정치권의 만연한 민낯과 모순의 덩어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하며 그 최종적인 합의가 개헌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유보할 이유도 늦출 필요도 없다"며 "촛불민심을 한 정파·한 정당의 문제로, 대통령을 새로 뽑는 문제로 국한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 불균형·지방 분권·제도적 모순·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개시 1년 이내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바뀐 헌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2020년 현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대한민국 운영의 원리를 바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더 고민할 것이며 호남민심의 야권에 기대감을 그분들이 잘 알 것이다"며 "하지만 내년 1월 전당대회 전에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손학규의 국민주권 개혁회의(가칭) 광주·전남 보고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현장 보존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과 면담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경도 투자 본계약 늦어질 듯

연륙교 재원 등 추가 논의
내년 1월 중순 마무리 가능성

금융그룹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여수 경도 1조원대 투자 본계약 체결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12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경도 연륙교 건설 재원 문제 등에 시간이 소요돼 2017년 1월 10일 전후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영국계 국제 투자회사 캐슬파인즈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전남도, 여수시, 전남개발공사 간 계약이 예상보다 10여 일 늦어질 예정이다.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전남개발공사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경도 연륙교 건설 재원 등 일부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은 골프장과 콘도 등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현재 소유주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입가는 3423억원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또 전남도, 여수시와 5년간 7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협약과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도와 돌산을 연결하는 편도 2차선, 총 길이 1.9㎞ 연륙교 건설이다. 총사업비 규모만 620억원으로, 재원 부담을 놓고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사업 예정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면 연륙교 건설에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케이블카 설치 등 나머지 현안도 내년 1월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업자를 위해 연륙교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셋과 캐슬파인즈는 7대3으로 출자해 경도 매입과 개발비용 1조1000억원가량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도에 호텔, 빌라, 요트마리나,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명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계약서만도 100페이지 이상 될 것 같아 법무법인에 최종 검토를 맡겼다"며 "검토가 끝나고 일부 안건들에 대해 최종적인 협의에 이르게 되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낙연 지사·임우진 청장·유근기 군수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이낙연 지사

임우진 청장

유근기 군수

이낙연 전남지사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 연세대 명예교수)으로부터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22일 "지방자치 행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 가운데 시도지사 부문의 수상자로 이 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구청장 부문에서는 자치행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군수 부문에서는 영화 '곡성'(哭聲)의 흥행에 호응해 지역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유근기 곡성군수가 선정됐으며 이날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운영하는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과 전국 지자체의 부단체장 및 기획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투표인단(1422명)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낙연 지사는 ▲'2016 전국 일자리 종합대상' 수상 ▲17년만의 제조업 종사자 10만 명 회복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호남선 KTX 2단계 추진 ▲남해안철도 공사 재개 등 장기 현안사업의 해결과 ▲100원 택시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등 전남만의 특색 있는 복지시책도 높게 평가했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각 1명씩 모두 4명에게 주어지며, 시도지사로서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상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반기문 지지자 모임 전국서 활동 본격화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국내 지지모임들도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 등 세분화된 모임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반 총장이 귀국해 대권행보에 나설 경우 이들이 '연대' 방식을 통해 대대적인 지지 조직 구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의 팬클럽인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는 22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반 총장을 지지하는 전국적 모임을 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본부와 시도 지역본부 및 시군별 지부, 직능본부 등을 두고 있는 협의체에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박봉식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고문으로, 김성옥 한국유권자연맹중앙회장, 최환 전 부산고검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집행위원장인 김정구 충북도민회 수석부회장은 "어느 세력에도 편향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어온 반 총장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노를 저을 선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반 총장을 지지하는 순수 민간단체로는 전국 최대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규모의 반 총장 팬클럽인 '반딧불이'는 다음달 10일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수도권본부 발족식 겸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글로벌 시민포럼' 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또 반 총장 귀국일에 인천공항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30~40대 충청지역 인사들의 모임인 '반사모 3040'도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